

제 3 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누구나 살기 좋은 활력있는 공간 조성

제2장 환경과 공존하는 스마트 농수산생태계 구축

제3장 그린·디지털 중심 산업 대전환 선도 거점 육성

제4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경관 조성

제6장 글로벌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제1장

누구나 살기 좋은 활력있는 공간 조성

제1절 지역특성별 맞춤형 공간기능 강화

제2절 유연한 성장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제3절 광역·지역 간 SOC 재편 및 확충

지역특성별 맞춤형 공간 기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지역 쇠퇴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 격차 심화
 - 전라남도 인구는 2010년 191만에서 연평균 0.3%씩 감소, 2020년말 기준 185만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고령인구 비율은 2003년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14년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현재(2019년 말 기준) 22.6%로 매우 높은 수준
 - 시군별 고령비율은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였으며, 담양군, 해남군, 완도군, 구례군, 진도군, 장흥군, 강진군, 곡성군, 신안군, 함평군, 보성군, 고흥군의 경우 고령비율이 30% 이상임
 - 동부권은 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구례군과 고흥군의 고령비율이 높고, 서남권은 목포시를 제외한 모든 군의 고령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중남부권과 광주근교권은 나주시를 제외한 모든 군의 고령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도시 쇠퇴가 지속되는 한편 권역별 격차 심화
 - 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인구는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약 43.4%를 차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27.2%)과 광주근교권(20.6%)과 격차가 크고, 중남부권(8.8%)은 동부권의 1/5 수준에 그침
 - 경제규모(GRDP)에서도 동부권이 전라남도의 약 60%를 점유하는 등 전라남도의 경제·인구 등이 집중
 -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악신도시 중심의 자립적 생활권 형성 및 대불국 가산단 등 서남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균형 지속

❖ 혁신도시 시즌2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지역거점 역할 미비

-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격차 완화 및 지방 혁신역량 강화,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 효과가 일부 가시화 되었으나 실적적 성과는 미비
 - 혁신도시 건설 완료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에 따라 혁신도시 1단계 정책이 완료되고, 혁신도시 시즌2에 진입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과를 주변 지역에 공유·확산 추진
 -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부진과 도시발전을 지원하는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미흡, 국가균형발전 핵심목표인 지역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 기능 미흡
-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창출과 일자리 육성·확대 등 지역의 역량강화 및 활력 증진 부족
 -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시간이 지나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초창기에는 어느정도 달성하였으나, 현재에는 고착화 상태이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혁신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도시·농산어촌 공간의 격차 심화

- 대도시권의 역할 강화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재편에 따라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격차 심화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제외한 농업, 어업 등의 비중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은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지역과의 격차가 심화
 - 동부권은 광업 및 제조업 비중이 49% 정도로 높고, 나머지 권역은 농림 및 어업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중남부권은 농림 및 어업의 총취업자 수가 절반에 육박
 -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내 폐교가 증가하고 의료인력 등에서도 시군별로 큰 편차가 나타남
 - * 시군별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고흥(75개), 완도(74개), 신안(74개) 등에서 폐교 수가 많음
 - * 전라남도내 총 병상수는 39,895개로 이 중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시가 56.6%를 차지한 반면, 완도, 진도, 신안, 장흥, 강진, 곡성 등 6개 군은 병상수가 500개 미만
 - * 의료인 수도 의사 55.4%, 치과 의사 60.5%, 한의사 51.4%가 5개 시에 집중
 - * 1시간 내 2차 의료서비스기관(병원급)에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 비율을 보면 완도, 장흥, 진도, 고흥 등 군지역이 10%를 초과한 반면, 5개 시지역 및 시 인접지역은 1% 이하로 나타남
- 농산어촌의 경우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촌공동화 심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
 - WTO/DDA 출범과 다양한 FTA 체결로 농업도 치열한 경쟁체계에 놓이는 등 어려운 무한경쟁시대에 진입
 -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 시장개방에 따라 우수한 품질과 낮은 가격이 농산물 가격경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
 -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심화, 농촌 공동화 심화 및 농업분야 성장 잠재력 약화, 청년층(18세~39세)의 농산업 취업 기피로 후계 농업인력 부족 심화
 - *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 : '03) 32.5% → '10) 38.7% → '16) 46.8%
 - * 청년 농업인구 : '12년) 30.8천명 → '13) 29.9천명 → '15) 24.4천명 → '16) 23.1천명

2. 여건 변화 및 전망

◈ 대도시 광역화와 권역별 압축적 도시권 형성 등 새로운 지역 공간 전략 요구

-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대도시권 및 권역별 인구 집중, 권역별 격차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별 성장관리 전략 필요

-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동부권과 서남권의 지역 간 격차의 폭을 증대시키고, 중남부권 지자체의 지방소멸 위기의식 증대에 따라 인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 심화
- 2040년 전라남도 읍면동 전체 297개소 중 229개소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전라남도의 대다수의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그림 III-1-1
전라남도 읍면동 별 소멸지수 분포(인구총조사 결과)



- 대도시권 강화와 권역별 주변도시의 연계에 따른 소외지역 발생에 대비한 지역격차 해소 전략 필요
 - 광주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이 연계·연담 되어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서남권의 목포시와 동부권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 간 연계권이 형성되어 지역 공간 구조 변화를 초래
 - 중남부권은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의 가속화에 따라 공간적 양극화 발생되고, 공공서비스 취약지역이 확대되는 등 지역격차 심화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

-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창출
 - 에너지 관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의 집적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변의 인구 감소 및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
- 창업·기업성장 플랫폼 구축, 혁신·협업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거점 육성
 -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생애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교류 공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업성장 및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혁신 및 창업 촉진
 -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대학,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정착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 농산어촌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기반시설 확충 요구 증대

- 귀농·귀촌 가속화에 따른 개방화 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귀농·귀촌인을 지역의 미래 주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 귀농·귀촌 인구 급증에 따라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16년)”을 수립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대책 발표
 - * 청년층 중심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체류형창업농장확대, 청년 창농 교육농장운영, 6차산업 창업 연계 등 지원
 - 정부는 청년농업인 양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청년창업농 중심의 농업혁신 성장 마련
 - * 청년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 지원 등 청년창업농의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등 청년창업농을 농업혁신성장의 핵심인력으로 양성
- 관광, 낚시, 요트 등 어촌관광레저 수요 증가, 도서지역 접근성 증진, 소규모 항·포구 안전성 확보,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 어촌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어촌 뉴딜 300 추진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도시·지역관리체계 전환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공간관리

- 지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권역별 광역적 계획체계 구축
 - 지역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생활권 재편 및 광역 공간구조 개편

- 광주 대도시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 공간구조 개편에 따라 지역 공간계획 체계의 실용성 제고
- 중남부권의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포용적·협력적 발전 강구
 - 소멸위험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능 압축 및 권역별 연계·협력, 성장 관리 체계 구축
 - 새로운 위기지역 대응 생활·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육성

- 지역의 새로운 성장 혁신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지역경쟁력 강화
 - 국가균형발전거점과 지역거점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 육성 촉진
 - 국가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간 공동 R&D 및 실증 프로젝트, 기술·제품 상용화, 인력 양성 등 지원 확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지역전략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내외 지역경쟁력 강화, 주변 지역의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국가적 차원의 성장유망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등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직류산업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협력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등 혁신도시와 상호연계 강화 추진

그림 III-1-2
빛가람 혁신도시



❖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농산어촌 간 지역 격차 해소

- 주변의 성장지역과 연계, 생활공간 단위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유연하고 기능적인 공간 균형전략 추진
 - 농산어촌 지역의 개발행위를 기반시설의 공급, 농산어촌 지역의 경관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인접한 공간으로 집약한 개발을 유도
 - 인접 시군과 연계·협력을 통한 의료·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자립적 생활권 구축, 지역 내 중심지 및 기초

생활거점 형성을 통한 활력 있고 매력 있는 농산어촌 공간 조성

- 농산어촌의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환경오염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도·농 통합공간을 확대하고, 녹지·공공공간 확충 등 차별적인 정주여건 확보

그림 III-1-3
(사례)고금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 계획도



2) 추진전략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지역 공간의 연대·협력 체계 구축

- 대도시권의 역할 강화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재편,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의 유연적 개편
 - 광주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의 광역권 공간구조 개편 및 중소도시를 연계 거점으로 형성되는 압축·다핵구조의 도시권으로 공간 구조 개편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 생활권 중심의 포용적 공간 활용에 따른 성장거점 조성형 지역 발전 전략 수립
- 지역소멸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생활공간 구축 및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인구 변화에 따른 공간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특성에 기반하는 생활서비스를 집약하여 권역별·지역별 격차 해소
 - 성장지역 연계, 생활공간 단위 공공서비스 제공 등 유연하고 기능적인 공간 전략으로 전환

📍 균형발전 제고를 위한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기반 강화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정주환경 개선
 - 국제교류거점 기능 지원을 위해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지역 내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이전공공기관 업무효율성 증진
 -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중심의 강소도시권 육성을 통한 인근 중소도시의 재도약 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거점을 중심으로 고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주변 중소도시와 생활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도약을 촉진하는 강소도시권 육성
 - 국가균형발전거점-구도심-중소도시 간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및 생활서비스 연계 강화, 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의 강소도시권 육성 지원

◈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정주 공간 개선

-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하는 농산어촌 중심지의 거점화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권 형성
 - 농산어촌 중심지-집단마을-한계마을 등의 계층구조 형성 및 이에 따른 관리 시스템 도입
 - 거점화 지역에 고차서비스 시설 및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및 생활권 형성을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공동생활영역에 포함하는 전략 추진
 - 지역 특산물, 생태·문화 등 농촌 특화자원 활용 등 거점화를 통한 지역 중심기능 강화
- 농산어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어촌 대상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반영
 - 귀농어·귀촌인 유치 가속화와 귀농 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 자원 확대 등 농산어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 여객선 기항지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마을 재생, 어촌관광수요 창출 등 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추진

3) 핵심 프로젝트

◈ 대도시 광역권 형성과 권역별 압축적 도시권 육성

- 대도시권 형성과 권역별 광역화 전략을 위한 지역-도시 간 중추 거점 및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1-가, 1-1-나)
 - 인구감소가 지역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기능의 압축과 연계를 통한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인접 시·군을 연계한 생활인프라 향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위계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추진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거점지역과 주변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 등을 연계한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도입방안 마련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업무·생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

- 공공기관 업무·생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경쟁력 및 지역 활성화 강화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2-다)

-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가족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여전히 큰 상황
-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보육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다양한 타부처 정주시설 건립도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시급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교통 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하고 '여가활동 환경'개선 및 '주거환경'의 점진 개선, '편의서비스 환경'의 유지·강화 필요
- 지역간·지역내 교통접근성에 대한 우선적인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인근 주변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
 - (교통 환경 개선 방향) 지역간·지역내 교통접근성 향상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방향) 주변 지역을 포함한 혁신도시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

📍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리체계 구축

-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와 매력 있는 공간 육성(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1-3,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3-가, 1-3-나)
 - 도시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분산 및 도농 동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촌을 모든 국민에게 매력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
 - OECD(2019)는 사람 중심의 저밀도 지역경제 전략을 새로운 농촌정책으로 채택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웰빙 향상을 목표로 정책 원칙을 제시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통합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 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등 중앙정부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유희화 대응 및 집약적 정주체계 개편,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 창출, 도시·생활서비스 강화로 교류·체류인구 유치 촉진
 - 농촌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촌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 농촌의 정주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집약하여 조성하고, 이를 배후지역과 연결하여 어디서나 일상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불편 없는 농촌 생활권 구축, 농산어촌 내 지역거점과 집단거주마을, 한계마을 등 정주계층별 관리 강화

-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확충·고도화하여 서비스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
- 인구감소지역은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등을 추진하여 기존 기반시설과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
 - 공간의 유휴화에 대응하여 농산어촌의 환경을 기존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경관·생태 자원을 보존·증진하여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
 -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인구 변화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이용 강구
- 귀농·귀촌 청년 및 도시 은퇴자 등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비롯해 농촌 주민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빈집, 유휴시설,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 귀농·귀촌 같은 고정된 인구의 개념을 넘어 여가·휴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촌에 체류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
-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비즈니스 혁신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지원
 - 원격의료·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고도화, 스마트화 촉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로컬푸드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구조 마련
 - 농촌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순환경제로 전환 지원,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 추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
- 새로운 낙후·위기지역의 포용적·맞춤형 지원방안 형성(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1-3)
 - 중앙정부는 소득, 환경, 재해 등 다양한 차원의 낙후·위기지역을 국가적 관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
 - 성장촉진지역, 도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부처별로 다양한 선정 기준과 지원제도를 장소기반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역발전효과 제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위기지역의 선제적 발굴 및 예방 대책을 마련 중
 -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 계획의 역할 재정립
 -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과 인근지역의 발전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확대
 - 국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계획 중 낙후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포함하여 지원 강화
 - 도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생활인프라 공급 추진
 - 현재 공급된 생활SOC는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있으나, 낙후지역·비도시지역에도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형평성 실현 및 국민이 체감한 삶의 질 제고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체계적 공급을 추진하고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지역 관리 및 최적의 계획 수립을 지원
- 생활SOC 접근성 제고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2-다)

- 그동안 생활SOC는 부처별·시설별로 각각의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되어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공급
 -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공급되어 지역 간, 지역 내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낙후지역·비도시지역 등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
- 낙후지역, 비도시지역에도 최저기준 생활SOC를 공급하여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형평성 실현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별·시설별 공급기준을 비교·검토하고, 도시·비도시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활인프라 서비스 국가최소기준 마련
- 전라남도가 수립하는 각종 지역개발 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생활SOC 국가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시설 확충 계획 추진
 - 각각의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SOC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균특회계 우선 지원 등 지역투자 확대 추진

유연한 성장 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 내 저·미이용·유휴공간 확대에 따른 도시 공간 환경의 악화

- 도시외곽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 왜곡 및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공간의 저·미 이용 유휴공간 확대 등 도시 공간 환경의 악화 지속
 - 대부분 도시개발 수요가 도시외곽의 신규개발에 공급됨에 따라 도시내 유휴토지는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
 - 전라남도 시·군의 인구증감 유형화를 보면, 지속적 쇠퇴지역은 1995년~2005년, 2005년~2016년 감소한 지역으로 목포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4개 시·군
 - * 잠재적 쇠퇴형은 전반기에는 인구가 성장하다가 후반기에는 절대 감소한 지역으로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으로 나타남
 - * 불안정 성장형은 후반기에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인구 증가율보다 낮거나 전반기 인구가 절대 감소하였으나 후반기에는 성장한 지역으로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담양군으로 나타남
 - * 안정적 성장형은 전·후반기 모두 전국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역으로 전남지역에는 전무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의 교외화·광역화에 따른 도심 쇠퇴 및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지속 등 도시성장관리 미흡
 - 장시대의 도시계획 논리와 과잉 도시개발 지속에 따라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이 지속
 - 도심 내 노후 인프라 증가와 유지·관리 미흡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
 - * 도심지역의 건축물 노후화는 평균 82% 이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
 - * 특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적·물리적 쇠퇴가 매우 심각

◇ 급격한 도시화와 신·구시가지간의 불균형 및 갈등

-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한편 구시가지와 원도심은 도시 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토지로서 효율적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와 자본유출에 따라 노령인구와 저소득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쇠퇴지역으로 전환
 - 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와 자본유출에 따라 노령인구와 저소득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쇠퇴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시가지와 원도심의 갈등 발생
 - 광역시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동부권과 서남권의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현상 발생
- 도시내부의 자생적 도시정비 기회 상실로 구시가지 환경의 열악과 기반시설 부족, 인근 도시와의 마찰 발생
 - 신시가지 및 신도시지역에 과도한 상업·업무 용지로 인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구도심 침체 및 재생수요 소진

- 도시 광역화의 급속한 진행과 교통 등 광역시설과 인구유출 등과 관련한 인접 시군간의 마찰이 발생

◈ 대도시화·광역화에 따른 다양한 도시 문제 발생

- 도시 열섬, 미세먼지·대기오염, 교통 혼잡, 도시슬럼화 등 다양한 도시 사회 문제 발생
 - 지구온난화로 인한 도시열섬 및 폭염 증가, 미세먼지는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각
- 스마트도시, 스마트홈, 제로에너지주택 등 도시 분야의 미래 도전과제와 핵심가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심의 정책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 공공 주도의 일방적 접근으로 시민 체감 부족
 - 신도시 및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 투자가 이루어져 신·구 시가지의 격차 증가
 - 나주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 해남군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였으나 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효과는 다소 미흡
- 전반적으로 기존 국내 스마트시티 모델은 첨단인프라 구축 중심
 -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신규 기술 또는 모델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방법과 교통 서비스 중심의 제한된 스마트시티 추진
 - 스마트시티 사업은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발판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노후 도심의 경우 자원 부족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미추진

2. 여건 변화 및 전망

◈ 도시의 적정 개발·관리 강화와 통합적 도시성장관리모델 개발 요구

- 인구감소시대의 생활SOC 취약지역 증가에 따른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일부 도시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면서 도시경쟁력 약화가 전망되는 한편 인구유출과 시가지 확산 등에 의한 도시 공동화 현상 심화, 인구 감소, 유희·방치 부동산 증가 등 부정적 파급 효과 유발
 -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 내에서도 인구분포의 공간적 불평등 심화 우려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
 -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생활SOC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도시·지역 공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정책 요구

- 도시공간의 균형개발과 관리를 위한 생활권 재편 및 압축도시 구현
 - 신·구시가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시가지 정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고, 밀도 관리를 통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의 배분 필요
 - 도시 외 지역 전역으로 성장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필요
- 많은 지방도시가 인구증가와 함께 성장되어 왔으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집적이 필요한 대규모 생활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워질 전망
 - 흩어진 인구를 적정하게 집적시키고 노인이나 주민이 대중교통을 통해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콤팩트 시티의 도시공간구조 형성 필요
 - 특히 원도심의 미개발, 저밀·저개발 유휴지를 활용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외곽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계별 과도한 개발 억제 요구

◆ 데이터 구축과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발전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 사회 문제 해소 방식의 변화
 - 기존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스마트시티 모델 도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전과 다른 포괄적 스마트시티 정책을 논의
 - 도시재설계,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정책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시정책 구현과 이에 따른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
 -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기반으로 사람·기기·공간·데이터가 도시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초연결될 것으로 전망
- 공공분야 중심의 초창기 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내비게이션업체의 도로지도, 인터넷 포털업체의 영상지도, 위치기반업체의 실내 지도 등 다양한 분야로 융복합 발전
 - 지자체 행정의 80% 이상이 위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빅데이터 활용, 개방형 융합 플랫폼을 통해 혁신 환경 조성
 - 공간정보에 기반 하는 정보화는 교통약자 경로 안내 서비스와 같은 복지 분야는 물론, 도시 공간 대기환경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예측경보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 분야에 활용 가능
- 도시 내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모델의 변화
 - 기상이변에 따른 복합 재난재해를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방재업무 지원 등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장
 - 도시 내 건설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방식의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운영 방안 도입

- * 스마트시티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규 SOC 구축 없이 도시 문제를 해결
- * 교통혼잡의 경우 교통사고 정보 제공 및 최적 경로를 제공하여 대응
- * 주차 문제의 경우 주변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 공간 탐색 시간 절약
- * CCTV 구축으로 경찰 인력을 보완함으로써, 인력 추가 없이 범죄예방 효율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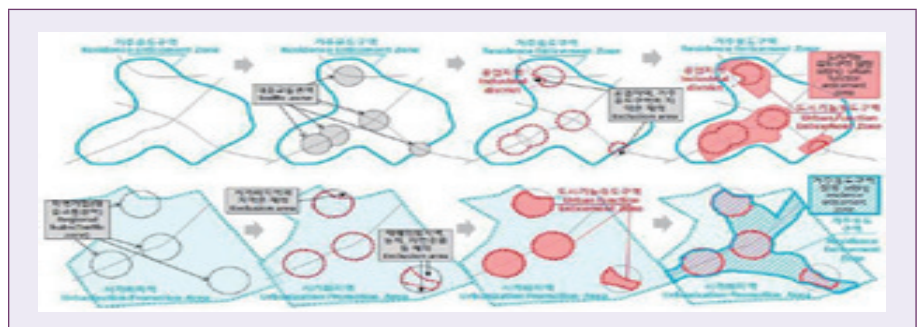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도시공간의 균형개발과 조화로운 관리 체계 구축

- 도시외곽 개발을 지양하고 자족성을 갖는 전남형 압축도시 모델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한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 방지
 - 지역 특화 및 장소 중심적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 사업-예산 체계 확보
 - 주민 주도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산화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선순환체계 마련
 -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생태계 조성
 - 구도심 지역의 유휴 공간·부지의 집약·복합적 활용을 통해 신규 주택과 상업·업무·산업 공간을 공급하는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유도
- 사회통합형 도시·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구도심 지역의 기존 성장거점의 공간·기능을 재구조화하여 산업·문화·공간과 경제·사회생태계가 융복합 된 새로운 성장 혁신기반 조성
 - 축소도시 내 스폰지형으로 존재하는 유휴 공간·공지를 그린인프라 등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여 도시 내 도·농 통합 공간 확대와 녹지·공공 공간 확충 등 차별적 정주여건 확보
 - 중장기적 차원에서 인구감소에 따라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과 인프라, 용도지역과 건물들을 재구조화하여 도시의 적정규모화를 실현하는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추진

그림 III-1-4
도시공간 관리체계 예시



◈ 도시·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용·협력의 발전방안 구축

- 도시·지역 내 생활거점 구성을 통한 도시공간의 압축 및 거점 간 연계 방안 구축
 - 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을 활용하여 생활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 및 정주구역 설정
 - 행정구역과 별개로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생활권을 설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신시가지와 원도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시가지 정비와 공동체 및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도심 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령가구의 증가는 주거공간의 개선 외에 의료·복지 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의 연계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전략 추진
 - 원도심과 신시가지의 포용·협력의 발전방안을 지향하고 새로운 공간균형 전략으로 전환

◈ 공간정보기반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도시 관리체계 구축

- 도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 공간정보 고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
 - 도시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적 스마트 시티 솔루션들이 주목받고 있음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의 스마트시티 적용은 정확한 도시 문제의 진단, 기술적 수준 향상보다 성과적 측면에서의 목표 달성, 리빙랩 적용을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
 -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이동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적용 및 확산
 - 표준화된 기준데이터 생산 및 가공 체계를 공유하여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부가정보 융복합 등 정보 재생산은 민간 중심 산업으로 확대 및 지원
- 초연결 빅데이터 체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 클라우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정비,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데이터·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제공
 - 정보 융복합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 지자체·민간 클라우드와의 호환 및 복합 분석·활용 환경 구축

2)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도시 내외부, 신·구시가지 등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 공간 재편 요구

- 광역화된 도시 외곽 지역 생활권 지양, 도시 내 미이용, 저이용 공간 개발 등 인구감소와 생활권 재편 등 도시 내·외 공간구조 재편과 신·구시가지 격차 해소를 위한 구시가지 정비 및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균형개발 지향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 자율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계 확보
 - 생활권 중심의 공간 활용을 위한 재생 활동 유도 및 전략 수립
 - 특정한 지역의 과도한 밀도개발을 지양하고 적절한 개발 수요를 배분하여 인구감소시대 밀도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및 유도
 - 도시 내 구도심 지역의 미이용·저이용 토지 및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인구감소 및 도시축소화에 대응한 사회 재건형 도시재생 활성화
 - 쇠퇴되는 구도심의 노후한 물리적 자산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 및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방지를 위한 도시외곽 개발을 지양하고 자족성을 갖는 전남형 압축도시 모델의 개발 및 구현

❖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지역 내 거점 설정 및 연계권 형성

- 지역과 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 지역의 압축전략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유휴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노후산업단지 및 공공시설의 이전, 휴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내 유휴공간에 신산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공급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구도심 지역의 기존 성장거점의 공간·기능을 재구조화하여 산업·문화·공간과 경제·사회생태계가 융복합된 새로운 성장 혁신기반 조성
- 인구감소 및 도시 축소화에 대응한 사회 재건형 도시재생 활성화
 - 신규 주택과 상업·업무·산업공간은 구도심 지역의 유휴공간·부지의 집약·복합적 활용을 통해 공급하는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 유도
 - 도심부는 미이용·저이용 토지로 인하여 밀도가 낮은 반면, 도시외곽지역은 높은 밀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택수요는 도시내부의 고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업무수요 역시 도시내 생활권상 활성화 거점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노후 건축물 및 빈집, 유휴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 지역 내 발생하는 신규수요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시가지 지역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을 지향하고, 도시·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를 활용

- 주택 노후화와 급속한 쇠퇴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을 긴급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재생 추진 본격화
- 빈집, 유휴·방치건축물 등이 집중된 구도심 및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우선 활용

❖ 체계적인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서비스 개발 및 적용

- 공간정보와 연계한 지능형 도시 관리 시스템 구축
 - 단순 도시개발이 아닌 지능형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도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 정보 기반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시범도시에서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확산하여 전라남도 모든 지역의 스마트시티화 및 지능형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인프라-플랫폼-혁신을 포괄하는 전남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및 확산
 - 혁신 공간 창출을 포함한 기반 인프라 구축-플랫폼 연계-실증-도시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완성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보급 및 확산
 - 현재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성과들을 확산하기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시티의 확산은 전지역의 스마트화로 이어지며, 스마트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구현

3) 핵심 프로젝트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남형 집약적 압축도시 구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국토종합계획 3-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1-2)
 -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친환경·스마트한 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확보 기준 개선
 - 과잉 기반시설 계획을 현실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공원, 휴식공간, 도·농 통합공간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계획하고, 지역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공간 정비
 - 주요 교통축, 생활문화축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행태를 분석하여 도시공간의 스마트한 도시공간 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
 -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등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 삶의 질 보장

그림 III-1-5
도시공간 재편과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네트워크형 압축도시를 조성하여 집약적인 도시공간구조 구축(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1-2)
 - 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유도구역, 생활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압축적인 공간구조로 재편
 - 압축된 공간은 녹지나 공원 등으로 재활용
 -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 공간 전체의 관점에서 네트워크형 압축도시 조성
 - 매년 공간의 압축성과 토지이용 복합도 등을 조사하여 거주유도구역으로 인구를 유도하고 도시기능유도기능에 생활 필요시설 집약화
 - 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시 토지이용 압축성을 측정하여 발전계획 수립 시 공간의 집약을 위한 측정지표로 활용
 - 생활거점지구를 교통축, 상업시설, 시설의 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반경 300m로 설정
 - 생활거점지구에는 도시 정주의 필수기능인 교육·의료·상업 기능과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의 고차 전문기능을 배치
 - 도시외곽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곽지역의 대규모 개발 시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최소밀도 규정과 규제수단의 도입
 - 새로운 주거지역이나 상업·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수요를 가능한 도심지역에 집약하고 외곽 개발은 지양
 - 생활거점지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서비스는 가능한 도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과 활용을 융·복합화
 - 문화·복지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토록 정비
- 중소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 전략 수립(2가지 형태)
 - 첫째, 미약하지만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도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시·군이 존재하는 형태
 - 주변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지만 중심도시가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와 개발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 하는 전략 수립
 - 주변 시·군은 중심도시와 각각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재편하고, 중심도시와의 연결부 혹은 그 외곽지역에 지역검정을 설정하여 기능을 강화
 - 중심도시와 지역생활권 사이에는 대중교통 연결망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차의 도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 둘째, 허브역할을 하는 중심도시가 없이 비슷한 규모와 성장력을 가지는 중소 도시들이 이웃하고 있는 형태
 - 중심도시가 없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소도시들의 경우로 단기적으로는 도시계획만이라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장기적으로는 이웃한 지자체와 행정구역을 연합하여 하나의 규모 있는 자치협력체제를 독립적으로 구성
 - 전남지역의 도시권들은 광주대도시권 이외에는 강력한 단일 핵이 존재하기보다는 중소규모의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핵이 상호 네트워크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중소도시권임

-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3~5개 도시를 연계하여 고차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30만명 내외의 배후 인구를 확보하는 강소도시권 육성 전략 수립

◉ 중소 거점도시의 도시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조성

- 전남지역의 특성과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국토종합계획 3-1)
 - 지역의 특화자원과 장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 사업 및 예산체계 확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성과 창출과 주민들의 도시재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에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정·사업구조 마련에 노력
 -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자산화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생태계 조성
 - 통합적 예산운용, 사업추진체계, 지역발전투자협약,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활용한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 중앙정부는 지역의 경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 마련과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추진을 지원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 지역 자율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자체 예산확보와 단계적 추진 거버넌스 마련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사회 회복형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 3-1-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1-3)
 - 대도시 및 지역 거점도시의 구도심 활력 제고와 성장거점 조성형 도시재생 추진
 - 구도심 지역의 유휴공간·부지의 집약·복합적 활용을 통해 도시공간의 압축적 이용을 유도
 - 빈집, 유휴·방치건축물 등이 집중된 구도심 및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공유주택의 도심 내 공급을 확대
 -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화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주체와 수요자로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소셜비즈니스 기반의 지역단위 구축 및 활용
 - 지역에 산재하는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인적·경제적 자본 강화
 - 청년·여성·퇴직자들이 공유경제 창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빈집,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제공
 -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경제 규모 축소에 적응하는 도시재생 추진과 지역자산 활용
 -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유휴·방치된 물리적 시설·토지를 도시 내 거주민들의 일시적 필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완화 계획 및 재생사업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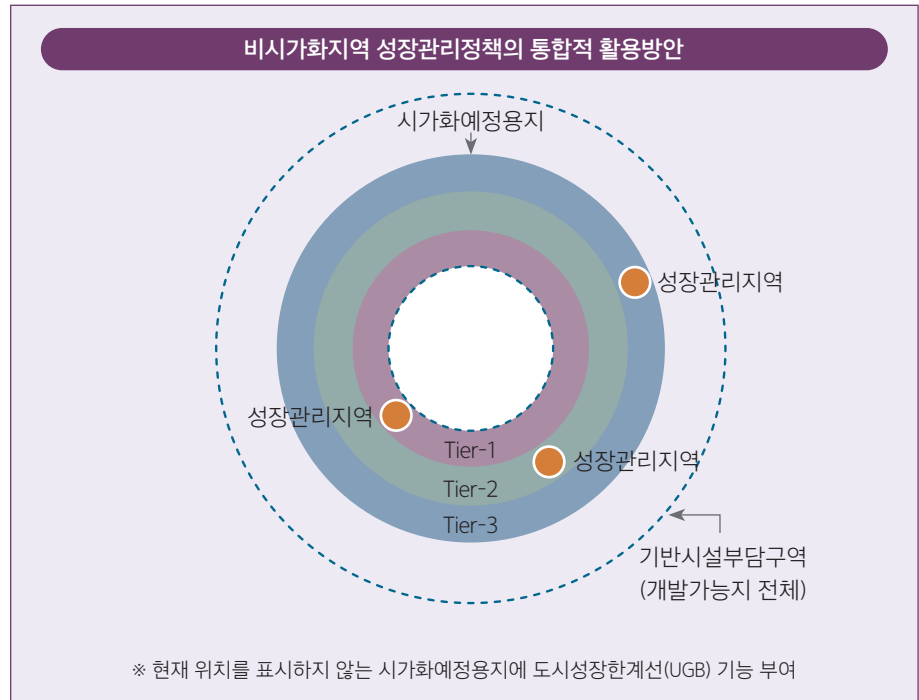
- 지역에 산재된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인적·경제적 자본 강화 목적의 사회적 관계 육성
- 노후화된 건축물 및 빈집, 방치건축물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활용(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1-나)
 - 노후·저층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및 노후·방치건축물의 소규모 정비 강화
 -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 한정공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빈집, 유휴·방치부동산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우선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공유 주택 도심 내 공급을 확대
 - 노후방치건축물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방식의 재정비를 확대·강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기법 발굴 및 확산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빈집의 단계별 정비·예방 체계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은 빈집 재생,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빈집을 지역자산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처방적 조치와 함께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 빈집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필요
 -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빈집 활용과 인식 확산을 위한 공개율 등 관련 통계 기반을 마련하여 빈집 발생 요인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 성장관리방안 모색

- 인구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3-1)
 - 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외에 지역의 특수한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한 용지를 산정하고,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용지별(주거, 상업 용지) 물량 산정기준 마련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적 개발은 지양하되, 도시공간의 복합·입체 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 지원
 - 비시가화 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관리 강화, 성장관리방안 내실화 추진
-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녹지지역은 중점 관리
 - 성장관리 대상지역의 개발수준, 정비방향을 고려해 중점·일반 관리로 세분화 하는 등 차등적 관리 강화
 - 개발압력 양상을 고려하여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되, 농촌생활권의 지구 중심 이나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집중 관리
 -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일반 관리가 필요한 곳은 상업형, 여가휴양형 등 유형별 관리 추진

- 통합적 도시 성장관리모델 개발(국토종합계획 3-1)
 -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커뮤니티 강화, 주거공간 조성, 첨단인프라 구축 등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
 - 지역 내 발생하는 신규 수요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시가화 지역 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정비를 유도하고, 마·저이용 토지를 우선 활용
 - 마·저이용 토지와 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마·저이용 토지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검토
- 특정지역의 과도한 밀도개발을 지양하고 적절한 개발 수요를 배분
 - 개발수요 및 밀도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적절한 개발 수요 배분
 - 시군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에서 용도별 개발수요를 고려한 밀도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유도
 - 밀도배분계획은 지역의 도시밀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 정도를 설정하여 수립
 - 주거밀도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계획하되, 공간위계상 중심지 지역은 중고밀 허용
 - 상업·업무 밀도의 경우 도시 전체의 상업·업무 수요를 추정해 주요 거점 및 중심지에 차별적으로 배분
-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및 공간적 범위 확대
 - 개발압력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는 계획관리지역 등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
 - 비시가화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최소화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의 허용용도 및 밀도와 유사하게 관리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유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을 개발수준, 정비방향을 고려하여 구역을 세분하고 차등적으로 관리
 -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선, 기반시설설치,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경관관리 등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 일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허용 용도 중심으로 관리
 - 일반관리구역은 주거형, 상업형, 복합형, 산업형, 여가휴양형 등으로 구분하고 허용용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용도에 따라 밀도를 차등적으로 운용

그림 III-1-6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통합적 활용방안



자료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구형수, 2018.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전남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과 확산(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 5-5-가)
 - 나주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 해남군 등은 공간·데이터 서비스에 기반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전남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하고,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으로 확산 추진
 - 중장기적으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단위 확산 및 장애인 독거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으로 포용성 확보
- 지역·도시 관리를 위한 전남형 스마트시티 개발과 확산 기반 조성(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5-5-나)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분야 외에도 복지 환경 등 서비스 분야 확대 추진
 - 기초 지자체와 연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센터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
 - 데이터 허브 기술 실증 및 6대 스마트서비스(교통·안전·행정·에너지·환경·생활 복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시범적으로 비즈니스 및 확산 추진
- 공간 빅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5-5-마)
 - 사회현상을 정확히 진단·예측하여 지역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 지역개발, 교통수요 분석, 재난 방지 등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 강화

광역·지역 간 SOC 재편 및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부족에 따른 지역 경쟁력 저하

-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및 교통서비스 제공 부족
 - 지방도 포장도는 2차로이하 ~ 6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2차로 이하의 포장도가 전체 연장 중 50% 이상을 점유하여 도시·지역간 교통연계시설 부족
 - 고도성장시기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일시에 집중되고 추진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부족
- 교통망·교통수단 부재에 따른 지역 경쟁력 저하 및 교통 사각지대 발생
 - 항만 물류량 증가와 지방공항 활성화·항공산업 연계 발전 방안 등이 요구되는 한편, 도로·철도 부족에 따른 접근성이 미흡
 - 일반국도의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초과하고 고속철도와 기구축된 철도가 병존하여 시설 및 안전 수준의 차이 발생
 - 섬지역의 경우 해상교통으로 교통수단이 한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농산어촌의 경우 도로 및 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서비스 체계 개선 필요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심화 및 상시화 고착

-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통행량 증가 지속 및 교통 집중화 발생
 - 대도시권의 지속적인 인구 집중,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광역화 진행에 따라 광역교통축의 용량초과로 교통 혼잡 심화
 -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교통축 및 정체가 발생하는 단속류구간과 병목구간 등이 고착화
-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부족에 따라 광역화에 어려움
 - 인근지역에서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개인교통수단으로 집중되어 있어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구축이 필요

◈ 항만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및 부가가치 창출 기능 미흡

- 전라남도는 지정항만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낮은 개발률로 여항·항포구는 열악한 실정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가어항 32개소,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90개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94개소, 비법정 어항인 소규모 항·포구 883개소 등 1,099개의 항·포구 분포
 - 전라남도는 1994년부터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어촌·도서 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인 어항·항포구는 상대적으로 열악
 - * 소규모 항·포구(1,291개, 전남 883개, 전국 대비 68% 차지)의 개소당 연평균 투자액은 5천만원에 불과
 - 어업활동 및 수산물 유통기지이자 어촌 정주환경의 핵심 기반인 어항은 어촌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어선세력의 변화, 어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률이 62%로 저조한 실정

- 항만과 도시 간 부조화 지속 및 상생 여건 미흡
 - 구항만의 경우 시설 노후화, 유향화, 미관저해, 공해발생 등의 이유로 인접한 도시의 기능 확장과 충돌이 가중
 - 항만 화물량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항만 배후단지 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 기능 미흡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 거점공항의 역할·기능 및 지역 공항 활성화 미흡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점공항 역할 및 기능 미흡
 - 서남권역의 중심 공항임에도 광주공항과의 통합·이전 시기가 불확실하여 거점 공항으로서 국내선 및 국제선 처리에 어려움 가중
 -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공항 통합을 전제로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필요
- 계획수립 추진 중인 지역공항 착공 지연 및 지역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와 성능 개선 추진
 - 흑산공항의 경우 착공 지연, 여수공항의 경우 공항 노후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 관리·성능개선 요구

2. 여건 변화 및 전망

◈ 핵심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광역간 발전 기반을 위한 교통체계 재편 요구

- 철도·도로·항만 구축으로 서남권 물류 중심지 역할 강화 및 한서남해안 경제벨트 전초기지 역할 강조 전망
 -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가 일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 간접자본의 재정비 요구 증대
 - 모든 수송 수단의 물동량 증가추세에 따라 주요 항만과 무안국제공항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필요
 -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철도, 도로망 등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광역 간 연계·협력 발전을 위한 기반 필요
 - 농산어촌과 섬지역 등 교통 사각지대의 생활·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광역화·광역 간 연계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광역간 상생 성장체제 구축 요구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효율화 및 체계 개선 요구

- 다핵적인 광역대도시 생활권의 계획적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망 재편과 지역 내부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지속
 - 광역대도시 주변에 조성된 인근 지역의 신도시·신시가지에서 대도시로의 통근·통학을 위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교통축에 교통 혼잡의 집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이 필요
 -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이 심화·상시화 되고,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광역교통 시설 및 교통망 체계 구축 필요
- 교통 환경에 있어 단일 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광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업 필요
 - 기존 대중교통 사업자 간의 갈등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서도 갈등 예상
 - 개인교통수단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고, 광역교통 시설에 있어 중앙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대형 허브항을 중심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허브 항만 역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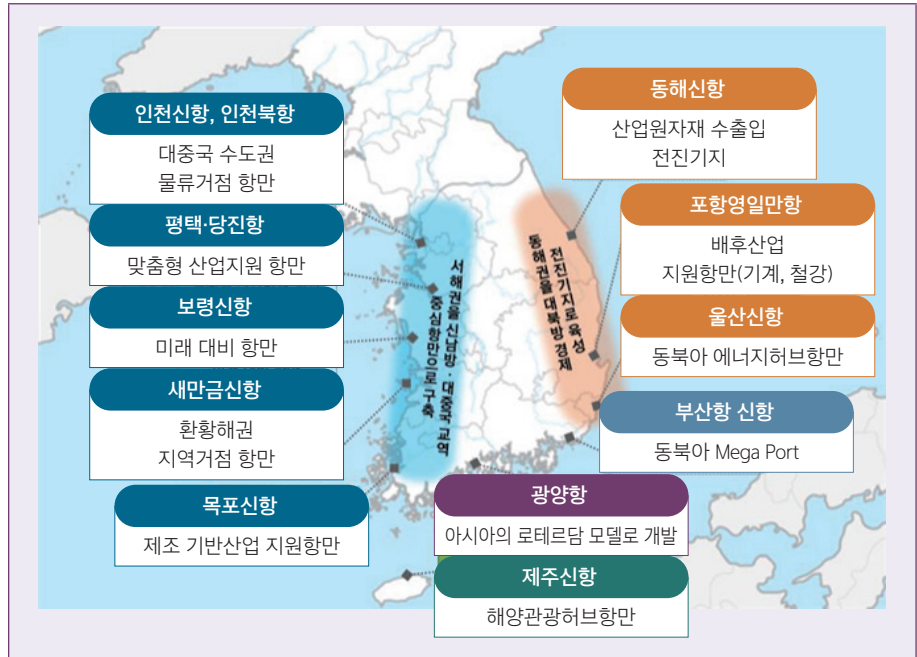
- 세계 항만환경의 변화는 전체 물류체계의 핵심기저로서의 항만의 역할과 국제 경쟁의 심화에 따른 첨단 항만관리운영 및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영리한 항만 (Brain Port)을 요구
 - 세계 경제 저성장 속에서도 전세계 수출액 및 물동량은 완만한 성장세 전망
-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증대 노력 가속화 요구
 - 항만 물동량 증가와 신항로 운영, 선박규모의 초대형화 추세에 따라 신규 투자 확대 및 컨테이너 기능 통합 추진 등 항만 효율성 증대 노력이 가속화되고 항만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3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기능 확대 및 시설고도화가 필요
 - 중국(칭다오), 미국(LA), 싱가포르 등에 완전 무인자동화 항만 건설이 계획 중으로 이에 대응한 인프라 증대 노력 필요

◆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제고 및 경제활동 거점으로서의 공항의 역할기능 강화

-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공항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동력 확보 요구
 - 공항 인프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제 연결성 강화 및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 요구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관리 및 공항 이용, 공항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운영 환경 조성 요구

- 국내선 항공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항공 관광 수요 창출 및 항공 산업 발전 기대
 - 공항-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 개발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 필요
 - 공항을 활용한 항공 이용 증가 예상과 항공 관광 수요 증가 기대에 따라 지역 공항의 역할과 기능 증대 필요

그림 III-1-7
항만별 특화 전략



자료: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참고 작성
출처: 제5차 국토종합계획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사회간접자본 안전성 확보에 따른 지역 경쟁력과 광역간 발전 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안전성 확보
 -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 개량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안정성 확보,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확대와 이동 편의 증대 도모
 - 권역별,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연계·개발하기 위해 지역·광역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공항, 항만 등의 배후시설과 연계하는 광역교통 계획 수립
-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교통기본권 확보
 - 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을 통해 미발전 지역으로 남아있는 도서·내륙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한 교통기본권 확보

◈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 및 광역급행버스 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망 확충
 -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의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등 개인 교통수단의 전환 최소화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광주도시철도 서비스 외 지역에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승용차 수송 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 대체 대중교통수단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승용차 수송분담률과 대도시 인근 시군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망 재편
 - 광주도시철도 서비스 외 지역에 있어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승용차 수송 부담률 수송을 고려한 광역 도로망 재편

◈ 항만 재정비를 통한 물류 거점 첨단 항만 육성

- 항만 운영 시스템의 첨단화·고도화를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
 - 광양항, 목포신항 등의 물류기능의 지능화·자동화, 노후 항만 재개발 등 동아시아 물류 거점화로 항만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
 - 항만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설비 투자,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청정 항만 시스템 구축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구축

그림 III-1-8
(예시) 첨단 항만 육성



◈ 경제활동 거점으로서의 공항 역할·기능 확대

-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객·물류 중심의 공항 역할 및 기능 확대
 - 거점공항의 시설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시설 확보
- 지역 공항 역할·기능 재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항의 역할 및 기능 재편

그림 III-1-9
(예시) 거점 공항 발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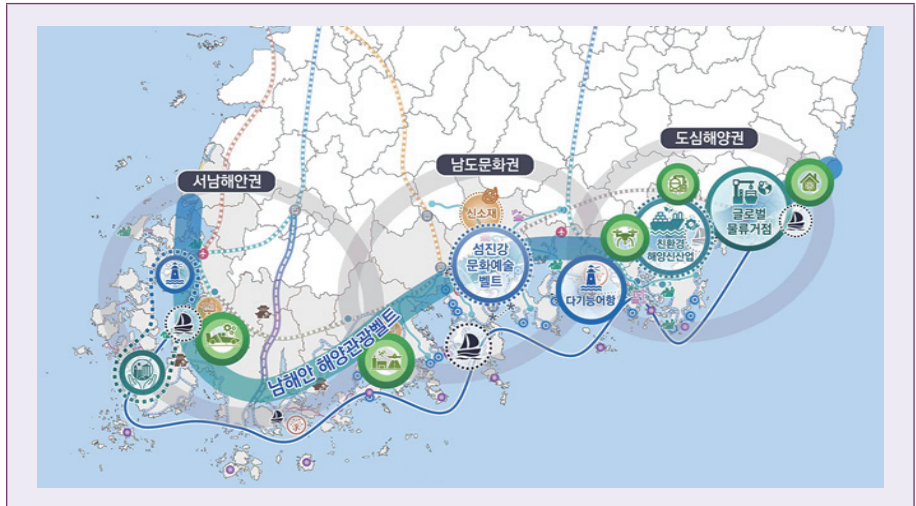


2) 추진전략

◈ 사회간접자본의 적기 개량·확충을 통한 교통 네트워크 재편

-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물류 교통망과 광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교통체계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환서남해안 경제벨트 전초기지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교통망 구축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기반 확충 및 해안관광 도로 건설
-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회간접자본의 재편 및 확충을 통해 지역 내 및 섬 주민 교통편의성 증진

그림 III-1-10
(사례)남해안 해양관광벨트



◈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서비스 재편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서비스 확대

-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도시권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 기존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연장을 통한 광역 도시철도망 구축, 도로 네트워크 강화, 도로의 간선 기능 회복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

- 거점 및 전략도시의 연계교통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 광역버스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연계·환승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광주 도시철도와 버스의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주 도시철도와 연계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광주 도시철도역 부근에 대규모 주차장 설치 등 개인 교통수단을 수용하여 광역교통망 재편에 따른 유연한 교통서비스 제공

◈ 해상물류 허브 기능 수행을 위한 물류 중심 첨단 항만 개발

- 광양항, 목포신항 등 동북아 해상물류 기반 조성을 통한 노후항만 시설 개선
 -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절감, 항만 이용자 편의 증진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의 조기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자원 확보 및 투자 노력, 연안여객 수요변화에 따른 해상교통 중심기지,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
 - 어촌어항의 필수기반시설 확충 및 차별화된 어촌 개발
 - 연안보전·친수연안사업, 연안관광자원 시설 조성,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양식장 정화사업 등 연안정비 사업 추진

◈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및 지역 공항 역할 기능 확대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역할,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추진 및 이를 대비한 공항 기반 시설 구축
 - 국제선·국내선 출도착 등 권역 관문공항 기능 수행 및 물류 중심 공항으로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흑산공항 조기 착공과 여수공항의 시설 개선 및 기능 확대

3) 핵심 프로젝트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재편 및 확충

-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광역교통망 확충(국토종합계획 III-5-1,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1-나, 5-1-나)
 -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국가간선도로망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 국가 건설계획 등에 반영된 신규 및 확장 노선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관계기관(기재부, 도시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의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일정 관리를 통해 고속교통 서비스지역 확대
 - 지역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섬·해양과 내륙을 잇는 교통망 확충

-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완도~고흥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 신안다이아몬드 제도(도초~하의 간, 추포~비금 간, 하의~장산 간) 연도교 건설
 - 완도 보길~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
 - 진도 진도항~하조도 간, 진도 지산~신안 하태 간 연륙교 건설
 - 신안 압해~해남 화원간 연륙연도교 건설, 신안 안좌~해남 화원 간 연륙교 건설
 - 여수 화태~백야, 월호도~금오도, 안도~연도 간 연도교 건설
 - 흑산공항 조기 착공
- 지역간 연계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 여수 돌산 우두~화태 도로확장(국도 17호선)
 - 광양항 울손산단 연결도로 개설
 - 남해고속도로 (순천~사천, 고서~순천) 왕복 6차로 확장 및 광양구간 선형개량
 - 영암~진도 고속도로 건설, 기업도시 진입도로 우수영 연장
 - 국도 24호선(현경~해제) 4차로 확장
 - 국지도49호선~담양·고창간 고속도로 연결
- 국가 철도망 구축 추진을 통한 이동성 강화(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5-1-마)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30)의 검토를 통해 미반영된 주요 거점간 고속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전철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조기 착공 및 광주~영광 연장
 - 서해철도(새만금~무안국제공항) 건설 및 목포~진도 연장 국가계획 반영

그림 III-1-11
전라남도 SOC 현황



◇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서비스 구축·운영

- 광역대중교통 구축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국토종합계획 계획지침 III-5-1)
 - 광주 대도시권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
 - 광역적 이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 도시철도 연장을 확대하고, 고속화가 필요한 구간 등을 검토
 - 버스·도시철도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역버스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를 향상, 수요자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연계·환승 시스템 구축, 교통비 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협력·조정형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운영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광역교통 문제 해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조정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자체 협력·조정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요금체계를 혁신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도시 구성에 따른 기존 도시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상생적 교통체계 마련
 - 광주·전남권 경제 및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한 광역 교통연계망 구축
 - 광역철도(광주~나주) 조기 착공 및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 광주전남 광역고속도로(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 순환교통망 조기 구축
 -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 농어촌 교통복지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 주민 정주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노선버스의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위해 보통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저렴한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소형승합차를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100원 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 활성화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버스형, 택시형) 활성화
 -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대한 100원 택시 활성화
 - 1일 노선버스 운행횟수 1~3회 미만 지역(마을)에 대해 지속적인 질적 양적 교통 서비스 향상
- 주민선호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시책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벽·오지의 체계적 운영관리
 - 시군의 행정·집행 및 운영·관리 역량의 전문성 제고, 수요맞춤형 승합자동차 및 환승시설 확충
 - 원활한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의체 구성·운영(주민 및 운영위원회, 운송업체, 지자체 등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계 구축)

◈ 동북아 물류중심 첨단 특화 항만 개발

- 광양항 특화개발
 - 양항 스마트 항만 육성(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자동화 시험장 구축), 광양항 울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광양항 동서측배수로 정비사업,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공사,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 광양(여천)항 개발
 - 광양(여천)항 낙포호안 보강공사,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Renewal
- 여수신항·신북항 개발
 - 여수신항~신북항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및 터미널 확장, 여수항 항만친수시설 조성
 - 국동항~여수구항 연결도로 개설
- 목포(신)항·북항 개발
 -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 목포 국제 다목적 카페리 부두 건설
 - 목포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공사
- 국가 어항 개발
 -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
 - * 어항이용의 지속적 수요 증가로 현재 삽진항은 물론 인근 북항 물양장과 소형어선 물양장이 포화상태로 대체항 개발 필요
 - * 대중국 등 수산물 수출과 유통 전진기지 어항으로 개발
 - * 세라믹 산단과 대양산단 활성화 및 수산식품수출단지 지원 배후항만으로 활용
 - * 어업, 낚시, 레저 등을 위한 대체어항으로서 현재 북항의 혼잡한 어선 수용능력 지원
 - 서망항 다기능 어항조성
 - * 해양수산부의 다기능 어항 확대개발 대상으로 선정되어 레포트타운 조성 등 다기능 어항으로 확대 개발(국비 400억원 투입)
 - * '02년부터 진도군 수협 서망 위판장 개장 이후 꽃게, 오징어, 조기 등 연근해 조업 어선의 이용 급증하고 있으나 항 규모가 작고 접안시설 등 부족(제적어선 420척, 어선수용 능력은 293척)
 - * 연안지역 경제중심지로 재창조, 관광·레저·친수시설 배후지역과의 연계 개발 등 수익 기반 다변화, 어항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어항기능 재배치 및 노후시설 현대화, 관광·레저를 통한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중심지 조성

◈ 국토 서남권 항공 여객·물류 기반 구축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중심 공항 활성화

-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이전 시기 선정
 - * 통합대비 무안공항 시설확충,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시설 확보 추진

- 흑산공항 조기 착공 및 활성화 지원
 - 관계부처 협의 부진 등 착공 지연요소의 조기 해소
 -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시설 확충, 항공노선 다각화 방안 강구를 통한 흑산공항 활성화
- 여수공항 시설 확충 및 국제노선 개설
 - COP33 유치를 위한 여수공항 국제노선 개설 등 공항시설 확충